

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대책

곽 용 선

- (배경) 소극적인 수도권 집중 요인 억제 정책에서 적극적인 기능 분산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
 - 이제까지의 조세 감면 위주의 지방 이전 지원책은 인센티브가 약해 지방 이전에 따르는 불이익을 상쇄하지 못함
 - 또한 금융기관과 연구기관 등 지원 기능의 부족으로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이 어려우나, 기업의 지방 이전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함
- (주요 내용) 지방 이전 기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제도를 구축함
 - (세제) 법인세·재산세·종합토지세를 외국인 투자 기업 수준으로 감면, 매각 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선적용, 조세감면 혜택 대상 지역을 광주·대전지역에서 부산·대구 지역까지 확대 포함 등
 - (금융) 이전 대상 사옥·공장에 대한 토지공사 및 성공업사의 우선 매입, 은행 대출금에 대한 재할인 지원, 산업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, 산업기반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,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신용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 등
 - (생활 여건 조성) 입지 여건 및 근로자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, 주변 SOC 건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일한 재정 지원 등
 - (인프라) 은행 본점 이전의 경우 기업 이전과 동일한 세제 지원, 대학 이전의 경우 기존 부지의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의 우선 매입과 기자재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우대, one-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등
- (평가 및 과제)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이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유인 중심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있으나,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토지수용권은 지방정부가 대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

(yskwak@hri.co.kr ☎ 724-4058)

최근 주요 정책(1999. 8. 23 ~ 8. 29)

「우리기업의 대외 진출 지원방안」	재정경제부 (8. 2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불수출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高위험국에 대한 연불수출 지원 확대 ·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제도 도입(수출보험법 개정) - 해외건설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건설공사의 최저 외화가득률 조건 하향 조정 · 개도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기금 설립 추진 - 해외투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 확대 -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지원 확대
「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대책」	재정경제부 (8. 2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 기업: 수도권 지역의 過密抑制圏域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-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·세제상의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기업에게는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지원을 확대 - 대학 및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 - 동 제도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
「금융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」	한국은행 (8. 2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에 한정하던 기업자유예금 대상자 확대 - 은행의 융통어음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-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을 차등 적용 - 非제조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지점별 총액한도대출 지원
「중소·벤처기업 육성 방안」	산업자원부 (8. 2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인프라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창업강좌 확대 등을 통해 2002년까지 10만 개의 창업 유도 · 벤처기업의 병역특례 범위 확대 - 융자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을 투자 방식으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업은행의 투자펀드 확대 · 9월중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· 코스닥 시장의 규모 확대 · 벤처기업간 주식교환(스왑)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

주요 정책 정보(1999. 8. 30 ~ 9. 5)

9. 2(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금융감독위원회·금융감독원) 99년 6월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실채권 규모는 98년말에 60조 2,000억 원, 99년 3월말에 65조 4,000억 원이었음 - 정부는 부실채권 처리에 투입될 공적자금을 64조 원으로 계획했으며, 현재는 약 13조 원 가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됨 - 금번에 발표될 현황은 6월말 기준이므로, 최근의 대그룹 경영위기로 인한 부실채권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의 부실채권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-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이 관건임
---------	--